

# 양파깍질 벗기듯 각종 비리 의혹 불거져

A고교 비리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입생들로부터의 대가성 고품과 보충수업비, 인재육성지원금의 부정 수령 등이 도교육청 감사 결과 꼬리를 낚힌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통학버스 고품 수수 계약, 교과서 채택 대가 수수, 위탁급식업체 선정 의혹 등이 의심된다. 도교육청은 밝혔다.

그야말로 양파깍질 벗기듯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전입생에게 대가성 고품 수수

전입한 학생들이 수백만원의 돈을 학교에 건네고 입학했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학생들로부터 확보된 녹취록과 진술서,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가 학생 전입 및 복학과 관련해 전입학생 학부모 4명으로부터 800만원, 전입생의 학부모로 추정되는 무기명기탁 1,200만원 등 총 8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기탁받은 사실이 있다.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돈을 받은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 ▶회계 불투명... 비자금 조성 의혹

특히 관련 고품에 대해 학교발전기금의 적절치 못한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2007년 이전부터 조성돼 온 장학기금 1억2,125만여원을 학교회계나 학교발전기금 회계 등 정식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로 예금주를 학교명으로 해 9개 정기예금 통장에 나눠 관리하는 등 학교발전기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 ▶보충수업비 부정수령... 회수·경고

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 EBS 방송수업을 실시하며 학교 내부적으로 '2004학년도 방송수업 교과배당, 수당 징수계획' 제목의 문건을 비공식적으로 작성해 1학년은 0.7교시, 2학년은 0.7·8교시, 3학년은 0교시에 EBS방송 수업을 감독하면서 보충수업을 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G교사 외 수령은 실제 수업은 하지 않으면서 수업을 한 것으로 허위 작성해 모두 203시간, 466만여원을 부당 수령한 것을 밝힌 것이다.

도교육청은 "보충수업비 등을 부당 수령한 일부 정황이 확인됐지만 집행 관련 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면서 "관련자 경고 처분"에 그쳤다.



한 고교 교실의 모습(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전입학생 8명에게 총 2000만원 기탁받아

장학기금 1억2,125만여원 정식 회계 편입 않고 관리

교감 임용대가로 5,000만원을 교문공사비로 위장 입금

### ▶지역인재육성사업 감사수당 부정 수령... 회수·주의·경고

A고등학교는 소재 군에서 '2012 지역인재육성사업 육성사업비'로 2억원을 교부받아 A고교와 타고교가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E씨 등 4명은 당연한 직무범위에 있는 진로교육을 실시한 후 감사 수당 181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탄로나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을, 해당 금액은 회수 조치됐다.

관련 지침에서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의 경우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F교감 역시 일반강사 2를 적용해 1시간 10만원, 초과시간 당 5만원으로 해 2시간 15만원을 총 2회에 걸쳐 3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경고 처분'과 함께 해당금액을 회수했다.

### ▶교감 승진대가 수천만원 부정인flux

A고교는 지난 2006~2007년 학교 교문공사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교감 임용대가로 5,000만원을 교문공사 사

장에게 위장 입금하는 등 임용부정을 저질렀다.

해당 교감은 당시 교감의 양심 선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교감이 학교를 위해 교문을 기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5,000만원 제공시점이 교감 지명시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대가성 의심된다. 감사결과 적시했다.

### ▶교내 백일장 성적조작 교사 벌금 수백만원 판결... 항소 중

지난 2014년 4월 도내 A고등학교에서 개최된 백일장 대회에서 H교사는 1등 학생을 '6등'으로, 4등인 학생을 '7등'으로 순위를 변경시키는 등 위계로 학교장의 백일장 수상자 선정 및 시상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A학교 교장은 "당초 담당 선생의 징계 과정에서 채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교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성희롱 논란

2013년 G씨는 교문지도를 하던 중 지각한 한 여학생에게 "너 나한테 와서 치마 벗고 엉덩이 한 번 맞으면 용서해주겠다"는 꾸지람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빚고 있다.

해당 여학생은 양호교사를 찾아가 '수치스럽다'는 성상탄을 3번에 걸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당시 3학년 학생이 증인을 나서겠다고 했지만 피해 학부모는 딸의 학교 생활을 위해 문제가 확대되길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진정사건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G씨가 관련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자와 보호자가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G씨는 해당 사안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G씨는 "아침 등교시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상황에서 특히 내 옆에 2명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할 리가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봐 주기식 감사에 솜방망이 처분' 그쳐

도교육청 '경고·주의' 조치 대부분

도교육청의 A학교 관련자들에게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봐 주기식 감사'라는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A고등학교에 대한 10여개 비리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실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B씨의 임용취소 요구, ▲C씨는 정직처분 및 임용관련 서류 무단폐기로 고발조치, ▲D교사는 교원 품위손상 경고, ▲E교장 외 4명은 2012년 지역인재육성사업비 감사수당 부당 수령으로 '주의' 및 '회수 조치', ▲F교감 외 3명은 2004년도 보충수업비 허위수령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채용비리와 고품수수, 성적조작, 성희롱 등 일부 사실이 확인되거나 논란이 불거진 사안인데도 도교육청의 처분은 '경고'나 '주의'가 대부분이다.

일부 확인된 B씨 임용부정과 교감 임용대가 수수, 보충수업비 허위수령, 위탁급식업체 선정대가 수수 등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할 예정임을 당시엔 밝혔지만 관련자 대부분은 현재까지 학교에서 교원 활동을 하고 있다.

입각에서는 도교육청의 이 같은 인사 징계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돈'과 '성'에 관련된 비리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모 초교에서 이뤄진 감사채용비리에서는 정직 1월과 같은 해 또 다른 초교에서의 회계질서문란 담당자는 감봉 3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지난해 무주군 소재 학교 소속 교원 3명에게 외부단체로부터 부당한 수당을 지급받고 회계절차를 미준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파면'과 '해임'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아울러 성 문제에 관해서도 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성희롱과 성추행 등과 관련해 5명의 교원을 파면 또는 해임한 바 있다. /고민형 기자

## 김 교육감 '사학 비리 척결' 은 공염불

전교조 "관련 법과제도 엄격하게 집행하면 된다"

사학 비리가 비록 일부 사학에 국한됐다고는 하지만 사학 스스로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사학 경영인들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충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던 김승환 교육감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이후 사립학교 비리와 인사에 대한 비판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관련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다"며 "지급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보호법이 아닌 사립학교 소유자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2012년 A 고교 교사채용 비리와 교직원들의 고품 수수가 이뤄진데 대해 "사학채용비리와 고품수수의 경우 현행법상 최고 수준 불이익 줄 것"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사학비리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과의 정책업무협의회에서 사립학교 인사위 규정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내세운 안건은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도내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게재, ▲매년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이행여부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내세운 14개 안건 중 3건을 제시해 사립학교 운영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과 제도만으로도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고, 심지어 임시 이사를 파견해 경영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여름방학 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와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진척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 ④ 차광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